

# 文, 北 미사일 발사에도 평화의지... “대화의 끈 놓아선 안돼”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 2027년 개통 목표... 설계·시공 추진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 강조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쏜 직후에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 최북단 역이자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제진역에서 이날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제진역이 사람들과 물류로 붐비는 그날, 마침내 한반도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릉~제진 철도 건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5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이 끝난 뒤 서명판에 서명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설사업은 강원 강릉시 남강릉신호장부터 고성군 제진역 간 111.74km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이고,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제진역은 2002년 남북 합의에 따라 2007년 북한 감호역과 연결된 곳

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구간이 개통하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돼 유라시아까지 뻗어갈 관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강릉~제진 철도 착공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강원권 관광산업 활성화 ▲남북철도 연결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 ▲대륙철도(시베리아·만주·몽골 횡단철도) 연결에 따른 유라시아 대륙 연결 등 경제적인 효과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정의선·동해선 연결 및 현대화 합의, 같은 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합의 사실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철도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점까지 전한 뒤 “우리의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남북 경제협력 필요성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다.

정부도 문 대통령이 내비친 의지를 반영한 듯 북측과 협력 재개에 대비, 북한철도현대화계획 수립 준비와 함께 자체 추진이 가능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 해당 철도건설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마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행사 당일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개통 이후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긴 축인 부산~나진 동해 축까지 완성되는 만큼 부산항 기점 대륙철도망 구축에 따른 비용 절감, 시간 단축 등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 기반 마련 등을 기대했다.

기존 대륙철도망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와 부산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남북·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에 대비해 2018년 가입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활동을 본격화하고, 접경 지역 등에 컨테이너 야적장(CY), 창고 등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 1인당 100만원... 與 ‘신년추경’ 만지작

“제때 놓치면 의미·역할 퇴색” 2월 내 임시국회 처리 등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를 향해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추경 편성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언급하며 여야를 향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전 국민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지급,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목표를 밝히며 명목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급방식은 소비쿠폰을 제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 제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현장 처참함은 수치로도 담기 어려울 지경이다.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도 새해 기자

회견 통해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다”며 “저희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신년 추경 편성에 있어 ▲여야 주도 추경 편성 ▲2월 내 임시국회 처리 ▲지원대상 확대 ▲재원 마련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듯 “새해 예산집행이 시작될 시기에 추경 논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정책에 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새해에는 전향적으로 여야가 국회에서는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고통은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연말방역 지원금 약 320만명보다 더 넓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시간제한 보상에 손실보상까지 대상을 넓혔으나 간접 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임에도 이번 추경은 규모에 대해 ‘넘친다’는 평가는 못

들어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당정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되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 상황은 안타깝지만, 원내지도부가 빠르게 구성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추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지 바란다”며 “야당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같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번 주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모습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5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이재명 “탈모치료 건보적용 검토” 탈모인 “李 뽑겠다 아니라 심을 것”

李 “신체 완전성 측면서 대상 돼야” 온라인 커뮤니티서 반응 폭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탈모에 대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다.

이재명 후보는 5일 광주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안 한 게 현실”이라며 “탈모가 건강보험 대상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부담이 얼마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본부에서(검토)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임정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움직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익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1000만 탈모인 여러분! 이재명으로 단결합시다”라며 호응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당시 2030세대 탈모에 대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던 것을 언급하며 “탈모는 질병이다. 그 스트레스, 그 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통, 그 눈길들을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취업, 연애 등 인간으로서의 자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도 5일 오후 ‘정책심기, 청년 탈모인 김원익과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은 더 뜨겁다. 이 후보는 SNS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 만들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알렸다.

이는 탈모인에게 민감한 ‘뽑는다’는 표현 대신 ‘심는다’는 표현을 활용해 이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심자’, ‘모(毛)두(頭)를 위해 이재명’, ‘우리강산 풍성하게’, ‘毛플리스트 이재명 풍성한 나라’, ‘이재명 hair 나올수가’,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등의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지지하는 패러디 ‘짤’도 쏟아지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박정익 기자